

# 전북 생태·환경자산 지원·참여 정책으로

###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보호·규제 중심에서 전환해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생태환경 녹색복원 추진 제안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2024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생명경제 실현과 민생기 도정과제인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생태·환경자산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태·환경자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보호와 행위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이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동부산악권은 보전산지와 국립공원으로 서부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왔으며, 민간의 참여 동기부여 부족과 이로 인한 규제 반대심리로 생태적 우수지역의 보호지역 지정도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생태·환경자산

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생태·환경자산을 분류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해 지역발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해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민·관 협력에 기반한 생방향 정책으로,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이 중심이 된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환경자산 가치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과 시범지역 지정·운영, △훼손된 생태환경의 녹색복원 사업, △생태·환경자산의 인식조사 및 평가지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먼저, 생태·환경자산 보전과 지역주민 인식 증진 및 경제적 혜택 제공을

위해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하고,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해 성공 가능성과 국가예산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산림 및 하천 생태축의 훼손·단절지역 생태축 복원, 들녘 등 농업지역 생태계의 보전과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생태공원 조성, 폐석산·폐산업시설 등 유유지와 환경오염지역 생태복원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생태·환경자산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전라북도의 핵심 생태·환경자산의 목록화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천정훈 연구원은 "전북의 강점인 생태·환경자산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중 후난성과 경제·문화·인적분야 교류 강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외교방문단은 지난 1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를 비롯해 후난성을 각각 방문해 경제·문화·인적분야 등의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11일 중국 청사시 후난호텔에서 마오 웨이밍 후난성정시(사진 오른쪽)와 경제·문화·인적분야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 “새만금 신공항 예산, 전액 삭감이나 마찬가지”

### 민주 김수홍 의원, 예결위 종합심사서 “내년 예산 8300여개 세부 국가사업 중 20여개 새만금 관련사업만 대폭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은 예결위 종합심사서에서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변형과 익산 탐천의 상습적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변형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수홍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은 국토부가 580억원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68억원 반영됐다”며, “반영된 68억원도 단기 설계 공모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이어서 사실상 새만금 신공항 예산은 전액 삭감되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세부사업수가



8,300여개 있고, 세부사업의 내역 사업이 4-5만여개 있는데, 새만금 관련 사업 20여개만 대폭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김수홍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급하는 예산이어서 사실상 새만금 신공항 예산은 전액 삭감되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세부사업수가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예산변형을 촉구했다.

익산시와 관련해서는 “탐천의 상습적인 침수예방을 위해 민경강 국가하천 배수영양구간인 탐천 정비사업(총사업비 1,653억원)의 설계비 70억원과 전북신체병원설립의 타당성 조사비 2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 소관 공항건설 예산 8개 사업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5,368억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100억원, 백령도 신공항 건설에 40억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173억,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에 64억원,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에 40억원, 서산공항 건설에 10억원 등 7개 사업에 전액 국토부가 요구한대로 정부안에 반영됐다.

/익산=이재훈기자

##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를”

### 강동화 도의원,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서 “기초학력 미달·부적응·학업중단 등 문제 발생 조기 개입·수요 고려한 정책·지원대상 늘려야”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은 지난 10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전북지역 결혼이민자는 1만2,175명으로 2015년 이후 전북지역의 결혼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5년 9,303명이었던 결혼이민자 수는 2021년 1만2,175명으로 28.72%가 증가했다. 2019년 이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결혼이민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도내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 전라북도 교육통계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학생(초·중



·고)의 수는 지난 2020년 7,720명, 2021년 8,105명, 2022년 8,228명, 2023년 8,6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학력연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학생의 증가로 현재 교육현장의 고된 역시 깊어지고 있는데, 언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다문화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 및 부적응·학업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학교 현장

내 문제로만 치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동화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으로 인한 학습 결손의 누적은 결국 학교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 부적응 및 통합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현장과 함께 지역사회 역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을 통해 다양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과후교육서비스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역자원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를 고려한다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결손·부적응·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북도 차원의 정책 확대 및 다양한 정책 마련과 함께 교육청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재훈 기자

## “장기기증 등록자 예우·지원 방안 마련을”

### 황영석 도의원,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서 “현재 관련 지원 정책은 공공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뿐 기증 등록자 지원·예우 등 지원방안 마련 시급”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은 지난 10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영석 의원은 “최근 뉴스 등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새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난 장기기증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되는 데, 우리 전북지역 역시 이를 위해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된 장기기증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최근 전라북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 이후부터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2019년 당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의 수가 2,421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전국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전북지역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21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전인 2019년에 비해 오히려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3만1,054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전북도 차원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를 늘릴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현재 전라북도 장기기증 활성

화 조례 제6조제항의 경우 장기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전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전북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수강료 등 감면, 뇌사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전북도의 경우 군산의 료원, 남원의료원, 마음사랑병원, 남원노인요양병원, 고창노인요양병원에서 입원료 및 외래 진료비 감면 만을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전북도 운영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 및 수강료 감면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황 의원은 “전라북도 운영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외에 기증 등록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예우 등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하며, 현재 전라북도 장기기증 활성

/김재훈 기자

### 민주 김윤덕 의원, 당 조직사무부총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선거 공천 실무를 전담할 조직사무부총장에 김윤덕 의원(전주갑)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총선 후보자 자격을 검증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병기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이밖에도 총선 기획단 인재위원회 등의 설치를 승인함으로써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를 시작했음을 알렸다.

이날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김윤덕 의원은 전

주시 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재선의원으로 당대표, 특보대장, 대표적속 기획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다.

지난 대선경선과정에서 이재명후보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아 호남지역 경선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조직부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전국의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등 조직분야를 관리하는 직책이다. /김재훈 기자

### 정읍시의회 정례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지난 1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4일까지 3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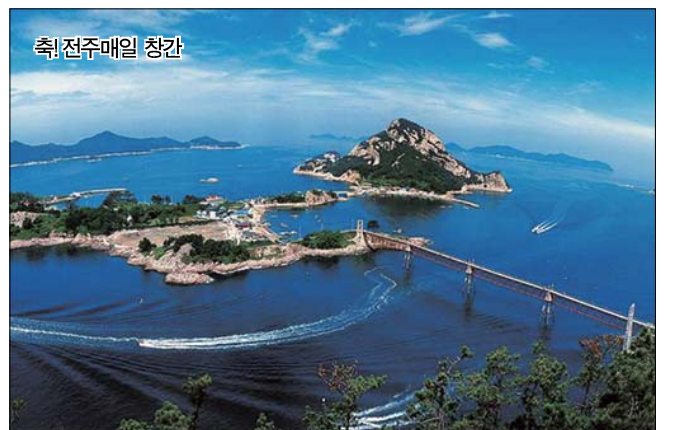
제차 본회의에서 고경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정읍시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서, 이학수 정읍시장의 2024년 시장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시장연설이 있었다.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험한 공유 자동차보드 운영 이대로 괜찮을까?'를 역설했고, 이상길 의원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서항경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응급)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고 촉구했고, 오명재 의원은 낙후되어 가는 신대인들과 상생의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안건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가결하였고, 김승범 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차 본회의를 종료했다.



열린 수협!  
희망의 수협!  
수산인에게 풍요로움을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조 합 장 김 광 철  
신용상임이사 이 성 준  
경제상임이사 김 형 문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夫)의 세상

www.gunsan-suhyup.co.kr